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서 노조원 6명 해고

노·사, 연봉제 임금 개편 예고에 팻말 시위 등 갈등 노조 “휴게 시간 선전전 적법 불구 부당해고” 주장 재단 “쟁의기간 아닌데 업무방해...상생해야” 촉구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제1시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법인인 빚고을 의료재단과 노조 사이 임금 협상에서 비롯된 갈등이 노조원 6명 일시 해고로 터져 나왔다.

노조는 임금 협상을 위해 투쟁에 나선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라며 반발 중인 한편, 재단 측은 해당 노조원들이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해온 점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해고에 부당성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11일 재단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 지부장 A씨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총 6명을 해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4월 병원 내부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2월께 병원 수탁 운영 기관이 기존 우암재단에서 빚고을 의료재단으로 변경, 임금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운영을 맡은 빚고을 재단은 기존 병원 직원들에게 적용돼온 호봉제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을 우려해 반발, 선전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재단은 최근 선전전을 열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A씨 등 노조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이들이 원무과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과도하게 선전전을 벌였다는 이유다. 4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6일 A씨 등 6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금 협상 불발과 직원 해고 사태는

파업 찬반 투표로 이어졌다.

노조는 지난 7일 부당 해고와 임금 개편에 맞선다며 파업 찬반 투표를 열었다. 전체 조합원 97명 중 82명(84.5%)이 파업에 찬성,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해고자들이 벌여온 팻말 시위가 재단 측의 눈엣가시가 돼 본보기 차원에서 벌어진 부당 해고라고 비판했다. 또 조정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과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들은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해 선전전을 벌여왔다. 병원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과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병원이 일상적으로 진행된 선전전에 병원이 과하게 반응, 인사위원회 끝에 12명 징계에 나서 6명을 해고하고 6명을 견제하는 등 사실상 노조 때려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지만 새로 바뀐 재단이 이를 거절했다. 고응승계는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은 보장이 어렵다며 끝내 개별 동의를 받아내 4월부터 임금을 삭

감했다”며 “조정 기간 내 임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재단 측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임금 개편 또한 병원 사정과 시중 임금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기간을 선포하지도 않고 선전전을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재단에 병원 운영을 맡긴 시 관계자, 경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징계 필요성을 인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라며 “이 결과 반성 소명이 없고 6회 이상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6명을 해고·고소, 이외 6명을 경고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개편은 시중 5개 대형 요양·정신병원의 연차, 교통 등 임금 수준을 모두 종합해 균등하게 정한 것이다. 개편 결과 비노조원 중에는 1000만 원 가까이 연봉이 깎인 직원도 있다”며 “적자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받은 병원의 자구책이다. 현재도 월 1억5000여 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상생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오유나 기자



여수경찰, 어르신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미평종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참여자 200명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수=김현근 기자



담양경찰,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 실시

담양경찰서는 최근 담양경찰서장 주관으로 담양소방서, 담양군청, 담양보건소, 1199부대, 31사단 화학지원대 등 6개기관 총 56명이 참석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해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의용소방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광양소방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을 더하고자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 기자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공동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하여 9일 지역 인사담당자 50명을 모시고 기업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오유나 기자



광양동백 로타리클럽, 회장단 아취임식 개최

광양시 여성 동백 로타리클럽 회장단 아취임식 행사에서 새로 취임한 손혜란 회장은 광양여중 교내 청소년 로타리 클럽으로 봉사활동하는 학생 8명에게 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광양=김현근 기자

바뀐 차주가 등록 미뤄 과태료...前주인 행정소송 결과는

차량 양도 후 등록 안고 보험도 미가입 구청은 前주인에 과태료...차량 압류도 무효 소송...法 “관련법 절차 있어 각하”

차량을 넘겨받은 주인이 이전 등록을 미루는 탓에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된 주인. 밀린 과태료에 차량 압류까지 들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한 차량을 소유했던 A씨는 2012년 B씨에게 차량을 양도했다. 양도 후 A씨는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씨가 차량 이전 등록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발생한 각종 교통범칙금이 A씨에게 날아오게 된 것. B씨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차량을 양도한 다음 해인 2013년 9월10일 용산구

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원 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태료가 미납되자 A씨 관할지인 용산구청은 그해 12월6일 차량을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A씨 측은 용산구에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신고했고, B씨를 만나 B씨가 직접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7월 차량 등록지를 B씨의 관할지인 성북구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

지 않은 것이다.

A씨와 B씨의 특약사항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록자가 이전됐고,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고지서는 계속해서 A씨에게 송부됐다.

결국 A씨는 용산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은 무효이며, 체납고지서 발부 중지 및 삭제 등 요구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곽동준·권오상)는 지난 3월30일 A씨 주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각하의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행정청이 내린 행위의 근거법상 행정소송 외 기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제48조 3항 1호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는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은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상 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이슬 기자



반려견과 쓰레기 줍기

11일 서울 서초구 매향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에서 열린 '반려견 놀이터 개장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산책로를 따라 반려견과 플로깅 캠페인을 하고 있다.

수익원 조건에 기술 빼들려 해외로 총 35건, 산업스파이 77명 검거해

중소기업 피해가 83%...열에 아홉은 내부인 소행

경찰청은 최근 4개월간 국내 핵심 산업 기술 탈취 등 '경제안보 위협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가 52%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 인력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왔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중에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 순이었다.

피해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이 28건(83%)으로 대기업(6건·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외부인에 의한 유출(14%)보다는 임직원 등 회사 내부인에 의한 유출(86%)이 많았다.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 27건(77%)이었고 해외 기술 유출도 8건(23%)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설비 매각을 담당하던 책임자 A씨가 프로젝트를 끝내자마자 영업비밀을 사진으로 무단 촬영해 외국 기업으로 이직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A씨는 연봉과 생활비는 물론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익원에 달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그를 붙잡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국내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B씨가 해외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반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가족을 먼저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공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